



런던 자치구의 생활권 통합과 런던 광역정부¹⁾

Tony Arbour | (현 대런던위원회(GLA)의 보수당 런던시의회(London Assembly) 의원, 도시계획과 주택분과 위원)
대담·정리 : 양도식 (영국도시건축연구소 UrbanPlasma(주) 소장)

1) 이 인터뷰는 필자의 런던플랜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2007년 실시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시점과 상황을 염두해 두고 읽을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런던을 대표하는 정부인 대런던위원회(GLA)의 설립이후 런던정부는 시장과 시의원의 선출 그리고 런던의 미래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런던플랜의 작성 등 여러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런던의 도시계획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런던시장과 대런던위원회를 고려해 생각할 때 런던의 도시계획시스템은 영국의 전형적 도시계획시스템과 아주 다릅니다. 런던 외의 지역에는 선거로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가 도시계획신청서의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대중 앞에서 열립니다. 만약 신청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무장관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런던시장의 도시계획 허가여부 결정권에 대해 설명하자면 시장은 자신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결정에 대한 호소는 주무장관에게 보내집니다. 의회에 관한 한 이는 민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자신의 법원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맡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도시계획체계의 개혁과 함께 런던플랜과 새로운 자치구계획(Local Development Frameworks)사이의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광역런던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계획관련 전략의 조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은 도시계획신청서의 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일개발계획(Unitary Development Plan)을 대신하는 새로운 자치구계획(Local Development Framework)은 시장이 작성한 런던플랜과 전체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런던플랜을 준비하는 것은 시장의 법령적 책임이며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런던플랜에 제시된 정책들은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견과 관계없이 런던 내 자치구 중 대부분이 이와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시장과 자치구들 사이의 주된 논쟁은 런던플랜을 사회공학의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시장의 시도입니다. 런던플랜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은 주택 정책으로 이를 이루려고 합니다. 시장은 각 자치구의 서민주택의 수가 얼마나 있어야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의 신청서가 런던플랜과 전체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각 자치구에 어떤 비율의 서민주택이 있어야 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자치구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논쟁이 새로운 개발에 포함될 서민주택의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런던시장이 런던플랜에서 제시한 서민주택공급 비율과 런던 내 자치구 계획과의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런던플랜에 나타난 서민주택공급 정책을 자치구 상황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어떤 자치구도 50%에 달하는 서민주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관여한 개발



일지라도 50%의 서민주택 비율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평균은 35%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자치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런던 동쪽에 위치한 자치구들은 이미 높은 비율의 서민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쪽의 자치구들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첫 번째 계획과 현재 계획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획에서 시장은 앞의 문제를 고려하여 동쪽 자치구들에게는 낮은 비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에서는 모든 새로운 개발에 50%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개발이 비경제적이어 반대를 하고 자치구들은 사회와 경제적 구성을 훼손할 것이라 믿어 반대를 합니다.

런던플랜의 부가계획문서로 여러 자치구를 묶어 5개 생활권(sub-region) 계획을 작성되었습니다. 생활권의 경계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하나의 변화입니다. 시장은 현존하는 지역의 경계선을 바꿨습니다. 이제 하나의 거대한 중심지역이 생겼습니다. 공간적 근거로 볼 때 런던은 방사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중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던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런던은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런던도심(Inner London)과 런던외곽입니다. 런던도심은 1964년에 폐지된 런던주의회의 경계와 관계가 있고 서쪽으로는 해머스미스(Hammersmith), 동쪽으로는 서덕(Southwark)에 접해 있습니다. 이 경계의 밖에는 런던외곽이 있습니다. 이 두 런던지역의 특성은 아주 다릅니다. 런던외곽은 궤도형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런던이 궤도형 작업을 더욱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런던의 지역을 새로 만드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해 현재 시장과 논쟁에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은 많은 자치구가 강제로 한 지역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재원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이 돈을 따라오는 것은 진실이지만 어느 특정한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현안은 그렇게 중요한

지 않습니다. 보수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시장의 미래 비전의 선행신호로 봅니다. 현재 시장은 런던의 32개 자치구를 관리하기 쉽게 5개의 대자치구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노동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5개의 자치구는 노동당이 통치하여 시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런던을 5개 생활권 계획으로 만든 특별한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5개라는 수가 최적이어서 5개의 대자치구로 나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32개의 소자치구보다는 5개의 대자치구가 통제하기 쉽다는 정치적 원리 때문에 통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구학적으로 2~3개의 자치구를 함께 합병시킬 수는 있습니다. 대자치구에 속할 평균 소자치구의 수는 6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런던 그 어느 곳에도 대자치구에 속하는 6개의 자치구 사이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각 자치구의 다른 정견을 볼 수 있습니다. 런던도심에 위치한 그린위치(Greenwich)와 루위섬(Lewisham)이 런던외곽의 브롬리(Bromely)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엔 부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자치구 중 하나에 이 세 자치구가 포함됩니다. 제가 대표하는 런던 남서쪽과 한슬로(Hounslow)는 두 대자치구로 나뉩니다. 서쪽의 한슬로와 남쪽의 리치몬드(Richmond)와 킹스톤(Kingston)이 통합됩니다. 리치몬드와 킹스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슬로는 전혀 다른 자치구입니다. 한슬로보다 위에 위치한 일링(Ealing)을 예로 들면 브렌트(Brent)와 하로우(Harrow) 자치구와 아주 비슷합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전략이 아니라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여러 소규모 자치구들보다는 소수의 대규모 자치구와 일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통합된 자치구 서로간의 관계는 협력체계는 어떻습니까?

런던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런던이 자신들을 하나의 마을로 보는 많은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템즈강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에 사는 사람들은 버몬지(Bermonsey)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들이 지역과 일체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로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과도 일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영국의 특성으로 1마일 거리에 사는 사람을 남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이웃과 상호교류 하는 것에 관해 지역구분은 무조건적인 실패입니다. 제가 알



기로 두 지역을 어떻게든 연결시킬 수 있는 기관들은 남런던파트너십(South London Partnership), 학습역량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와 의료서비스 같은 기관들입니다. 올해까지 런던의 의료서비스는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각 자치구마다 의료서비스를 관리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는 몇 자치구들이 다른 자치구를 위해 자신들의 의료서비스를 나누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들은 자신들의 예산을 직접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지역구분을 환영하는 이들은 관료적인 기관들이 전부입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의 인구가 있으니 넓은 지역에 2백 만 명의 인구를 가진 5개의 지역이 있겠군요. 이 지역이 서로 가진 공통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런던에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미들섹스주(Middlesex County)는 1964년 런던정부법령에 의해 대런던의회(Greater London Council)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미들섹스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미들섹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40년 전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들섹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런던시민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런던 우편배달구역에 사는 시민들입니다. 런던 우편배달구역들은 SW, NW 구역 등으로 시작합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런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노동당을 정권을 잡고 있었던 지난 10년간 권한은 이양되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경우는 다릅니다. 런던 자치구들의 힘은 첫 째로 대런던위원회와 시장에게, 그 후 도시계획에 관한 '섹션 106' (Section 106) 동의하에 중앙정부에게 권한을 양도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런던 자치구들은 자치구 문제를 위해 자체소득의 1/4도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로 보내집니다. 런던자치구들은 중앙정부의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런던에는 권한 양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권한을 양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런던자치구들의 가장 큰 불평은 의회와 정부에 권한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현재 아주 중앙집권적입니다. 이는 사회주의의 특성입니다.

런던시장과 런던 시의회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둘은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째로 대런던위원회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오직 시장만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행정력은 도시계획정책에 있습니다. 시장은 런던플랜에 자신의 정책들을 나타내고 실행하려 합니다. 시장의 다른 행정력은 경찰과 교통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자치구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가 양도한 몇 안되는 권한이지만 이마저도 시장이 같은 당에 소속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의회는 2000년부터 존재했고 이는 유일한 권한양도입니다. 노동당자치구를 포함한 많은 자치구들이 시장과 시의회와 협력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도시계획정책을 예로 들면 자치구들은 자신들의 도시계획정책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장이 정하는 현안이지만 시장은 그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그 자치구의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도를 보며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지역이 철도에 근접해 있을 경우 아파트를 짓는 것이 시장의 정책입니다. 그는 교통교점 근처에 초고층빌딩을 짓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치구는 그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내에서도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당은 시장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노동당은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 노동당 자치구 역시 시장의 권한을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런던 시의회와 이에 대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런던 시의회는 런던 자치구들이 소속된 하나의 클럽으로 보면 됩니다. 런던 시의회는 시장의 권한에 관해 아주 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에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장에게 더욱 많은 권한을 양도하는 법령에 관해 두 번째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런던 시의회는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자치구(생활권)의 도시계획정책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론상으로 영국의 도시계획정책은 넘비(NIMBY) 정책입니다. 특히 남잉글랜드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넘비 정책은 'Not In My Back Yard'의 약어입니다. 지역이기주의 정책이죠. 또 다른 버전은 바나나(BANANA) 정책입니다.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thing의 약어로 넘비와 비슷한 말입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중은 보통 정책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제 생각에는 새롭게 도입된 자치구 계획인 지역개발골격이 이를 변화시키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골격은 지속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개발골격에 그리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자들의 일을 더욱 증가시키고 공동체의 협력을 방해합니다. 아주 회의적이죠.

1985년 설립되어 1986년에 폐기된 이전의 런던정부를 대표했던 대런던회의(Greater London Council)와 2000년 설립된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전 대런던회의(Greater London Council)의 의원이었습니다. 대런던회의는 행정력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도시계획, 교육, 소방, 교통에 관한 행정력을 구사했고 의로서 비스에도 적지 않은 권한을 행했습니다. 회의에는 100명의 임원이 있었고 이들은 선거구 대표들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는 임원이 25명밖에 안 됩니다. 의회의 경우 런던시장만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00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의 지지자들이 런던에 하나의 전략적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자치구마다 다른 도로시스템을 가질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대런던회의(GLC)의 폐지와 대런던위원회(GLA)의 설립 사이의 20년 공백동안 런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무 일 없이 지냈고 광역지역전략기관이 없는 공백 기간 동안 엉망으로 운영되었다는 사례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전략기관을 그리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외곽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런던중심부에서는 아마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대런



던회의가 런던도심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었기 때문에 폐지된 후 런던도심에 위치한 소규모 자치구들이 책임을 이어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대런던의회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대런던위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의회의 설립이 노동당의 선거 성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런던 시의회의 주택분과에 게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던의 주택관련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이 시장에게 주어질 추가될 권한인 시장의 주택정책입니다. 세계2차 대전 이후 1950년대에는 노동정부가 정권을 잡았고 그 당시 주택장관은 런던에서 보수당을 몰아내겠다고 하였고 거의 성공했습니다. 대규모의 서민주택단지를 지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런던시장도 그

의 도시계획획득(Planning gains) 정책을 통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방법이 정말로 현명한 판단인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종류가 맞은 종류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주택의 대부분은 1~2개의 침실을 가진 단위입니다.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3~4 침실 주택입니다. 하지만 단위로 설명되는 도시계획획득 때문에 현재 3~4 침실 주택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단위 대신 지역으로 대체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장기적인 문제인데 런던외곽이 다시 거주목적인 교외주택지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외곽은 다시 런던 인구가 자는 곳이 되어 더 이상 마을공동체 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우체국과 맥주집은 사라졌고 교회는 방문이 목적인 더 이상 공동체의 중심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같은 변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자리를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옮겨 균형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제 공장들은 문을 닫고 영국은 서비스경제로 발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오전 시내중심부로 들어오는 가득 찬 기차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외라는 개념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계속 있어야 할까요. 서울은 그린벨트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현재 대런던위원회의 시의회 의석구성과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런던위원회에는 보수당이 과반수입니다. 14자리의 의석 중 9자리를 보수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노동당의석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선거시스템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자치구의회의 선거결과를 보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당이 런던을 전체적으로 차지했습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보수당이 이전에는 평판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기억력은 재법 짧기 때문에 용서를 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대처여사가 수상을 지낼 때 연속으로 세 번의 임기를 지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노동당에 지쳤었습니다

| 열린기획 |

▶▶▶ 런던 자치구에 공간개발 권한을 더욱더 이양하는 노동당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당의 정책에 관한 지역주민들이 공간개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압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권한을 자치구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치구들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임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언에 찬성하기 보단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대형마트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배치된 많은 수의 대형마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형마트를 시장은 특정지역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역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도 비슷합니다. 런던 전체에 공통된 교육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서덕(Southwark)에 적당한 교육시스템이 95% 앵글로색슨인 지역인 브롬리(Bromley)에 적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치몬드 또한 인구의 95% 이상이 백인입니다.

소수민족이 사는 곳을 보면 대부분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런던외곽에는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인 런던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시대부터 있었던 일이고 현재의 런던을 만들었습니다. 16~17세기경에 영국으로 이주한 위그노 교도와 그 뒤를 따른 개신교도들은 거의 모두 런던에 살았습니다. 그 후 천천히 외곽으로 움직이며 동화되었고 런던도심부에는 새로운 민족이 이주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재의 런던이 만들어 졌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노동당의 런던시장과 런던시의회로 구성된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에 대해서 보수당 시의원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수당의 현재 정책 중 하나가 런던시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보수당의 시장이 뽑힐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개발자의 동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창문 밖을 보십시오. 밖에 보이는 건축공사를 보십시오. 이들은 보수정부가 아니라 노동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카네리윙프, 그린위치와 템즈케이트웨이의 확장을 보시면 이들은 지역기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회사들은 아주 높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60년대의 전성기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이는 노동당 정부 아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자면 보수당은 부자들의 당이라는 고정관념이 심하고 또한 다문화주의를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대체주의의 전성기인 1983~89년 사이의 기간을 보면 70년대의 경제침체 이후 놀랄 만한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있었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토니 블레어 수상도 자신을 대처의 추종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블레어 수상이 인기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그녀만큼 강박하진 않지만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영국에 사회혁명이 있었다면 그는 공영주택의 판매와 공공의 에너지회사, 브리티시항공의 민간화일 것입니다. 공영주택의 판매는 주택소유자의 수를 급증시켰고 공공회사의 민간화는 개개인을 자본가와 주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도 역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세계경제의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확실히 통하는 방법입니다. 구소련과 중국을 보십시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국민들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승자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